

버지니아 울프의 5백 파운드는 기본소득일까 기본자산일까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참관기

오준호

용혜인의원실 비서관.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지은이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국회 토론회가 1월 28일에 열렸다. 토론회는 청중 없이 진행되고 유튜브로 중계됐다.

토론회 좌장은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가 맡았으며,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를 서정희 군산대 교수가 발표하고 이어 ‘왜 기본자산 제도인가’를 김만권 경희대 교수가 발표했다. 서정희 교수는 『기본소득이 온다』의 공저자이고 김만권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소개하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의 저자다. 이날 토론자로는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과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김두관 의원, 소병훈 의원, 허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소병훈 의원, 허영 의원, 용혜인 의원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운영진이며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활발히 발의 중이다. 정의당은 총선에서 ‘청년기초자산제’라는 이름의 기본자산 정책을 제안했고 김두관 의원은 최근 본인의 주요 정책으로 기본자산제를 부각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20세기 초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이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자기만의 방과 연 500파운드의 소득이라고 했다. 울프는 여성참정권 획득 소식보다 숙모가 돌아가시며 유산으로 연 500 파운드를 자기에게 남겼다는 소식에 더 기뻐했다고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500파운드가 지금 가치로 얼마인지 조사한 적 있다. 막연히 ‘최저생계비쯤이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약 4천만 원이란 걸 알고 놀랐다.

울프가 바란 것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보조금이 아니라 안정과 자유를 보장할 만큼의 돈이었다. 게다가 그 돈은 해마다 들어온다. 울프는 여성이 독립된 인격으로 살아가려면 그 정도 돈을 권리로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라도 상상해보자. 울프처럼 자비롭고 부유한 친척에게 큰돈을 받는다고. 그런데 고약하게도 우리는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하자. 하나는 딱 한 번 목돈으로 5천만 원을 받는 것이고 그걸로 끝이다. 다른 하나는 다달이 50만 원씩 평생 받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무얼 택할까?

이 의문은 그저 행복한 상상으로 남겨둬도 된다. 하지만 상상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사람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필요한 물질적 수단을 사회에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대가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빈곤을 증명하지 않고도 말이다. 그것이 권리라면 상상이 아니라 제도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자는 두 아이디어가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이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정기 지급하는 현금 급여다. 기본자산은 성인이 되는 시기 한 차례 지급하는 목돈이다. 기본소득은 생활비의 성격이 크고 기본자산은 출발자금의 성격이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이론적 뿌리는 역사가 길지만 최근 두 정책이 주목받는 건 악화되는 불평등 때문이다. 기존 복지제도가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기본소득 또는 기본자산이 불평등 해결책이 되리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면서 두 제도에 질문도 쏟아진다. 둘 중 무엇이 불평등 해결에 더 효과적인가? 실현 가능성은 무엇이 높은가? 부작용은 없는가?

이런 의문에 답을 찾기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론의 장을 열었고 기본소득 또는 기본자산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나는

행사의 실무 준비에 관여하고 또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토론을 흥미진진하게 관전했다. 눈이 펄펄 내리는 날, 여의도 기본소득당 당사 회의실에서는 기본소득, 기본자산의 내로라하는 이론가들이 뜨겁게 논쟁을 벌였다.

기본소득의 ‘생활 안정성’과 기본자산의 ‘거시 자유’

“기본소득과 기본자산¹⁾은 모두 사회가 공유한 부에 대한 권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뿌리가 같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공통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분배 방식에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지향하는 사회나 개인 삶의 차이로 이어지죠.”

서 교수는 두 제도의 차이를 기본소득의 원칙인 정기성, 보편성, 무조건성을 기준 삼아 설명했다. 정기성에서 “기본자산은 거시 자유 실현을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기본소득은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서 교수는 “생활의 안정성 담보 없이 거시 자유가 가능할까요?”라고 물었다. 또 “목돈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는 기본자산은 결국 각자 자산 증식을 피하는 투자자의 삶을 선택하게 만듭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전혀 다른 의미다.

“기본소득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여 일상의 유지와 계획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보편성에서 서 교수는 기본자산 지급 대상이 주로 청년에 한정된다는 점을 겨냥했다. “기본자산이 강조하는 ‘사회적 상속’을 인정하더라도 왜 청년만 상속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로 드러났지만 삶의 위험은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고 그 위에 추가로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라고 서 교수는 강조했다. 무조건성에서 기본자산은 교육, 창업, 주거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이는데, 공유부 배당을 조건을 달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서 교수의 견해다.

덧붙여 서정희 교수는 “한국에서 논의되는 기본자산은 증세 없이 기존 상속세 재원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증세 없는 낮은 수준의 기본자산은 자산 불평등 완화 효과도 떨어집니다”라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기본자산 사용을 주택 구입 등에 제한한다면 부동산 시장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교육이나 주거는 기본자산이 아닌 공공서비스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만권 경희대 교수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서 교수님 발표를 듣다가 ‘내가 이렇게 위험한 생각을 지지했던가?’ 하고 놀랐습니다.”

1) 기본자산은 기초자산이라고도 한다. 서 교수는 발표에서 일관되게 ‘기초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토론회를 기획하며 행사 제목에 ‘기본자산’을 넣기로 했다. 이 글도 그에 따라 기본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목적은 각각 ‘기본적 소비력 보장’과 ‘인생계획 실행 기회 제공’으로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자산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속’을 주자는 것이며, 세대 간 불평등 완화에 더 효과적 대안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본자산이 더 나은 대안인 세 가지 이유로 ‘계층 간 이동 가능성’ ‘재원 마련의 현실성’ ‘최초 수용과정에서 정치적 안정성’을 들었다.

“기본자산은 인생계획을 실천할 힘을 제공하여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높입니다. 3천만 원 준다고 뭘 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여럿이 모으면 상당한 자본금이 될 수 있지요.”

또 김 교수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기존 조세체계와 분배체계를 다 바꿔야 하지만, 기본자산은 기존 분배체계에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사회진출 청년에게 3천만 원씩 주더라도 연 16조 원 안팎”이며 30만 원씩 줘도 연 180조가 필요한 기본소득보다 재원이 적게 들어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기본자산은 재원 규모가 작아 기존 복지 수혜자의 조세저항이 최소화되므로 “최초 수용과정에서 기본자산이 정치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다만 김 교수는 현실에서는 기본소득이 더 주목받는다며 그 이유는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보지만 기본자산은 유권자 대다수가 직접 수혜를 누릴 수 없어서”라고 했다. “기본자산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생애주기 자본금’을 제안합니다.” 생애주기 자본금은 20년마다,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액수의 목돈을 배당하는 것이다. “가령 20살, 40살, 60살에 새로운 인생 설계를 위한 목돈을 지급할 수 있죠.”

서 교수와 김 교수의 발표까지 듣고 나는 ‘목돈이나 정기적 급여냐’ 차이 이면에 두 제도 사이 철학적, 정치적 논점들이 이렇게 많다는 데 놀랐고 또 반가웠다. 이런 논쟁이 있어야 ‘가장 힘든 사람을 어떻게 잘 선별할까’ 수준에 머무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담론에 충격을 주고 새로운 전망이 생겨나게 할 수 있다.

다만 발표를 들으면서 기본소득론자의 기본자산 비판 중 일부는 기본소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령 기본자산을 청년에게 주는 것이 보편성 원칙 훼손이라면 청년에게 먼저 범주형 기본소득을 주는 것도 그렇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현실론을, 상대에게 원칙론을 엄격히 적용하면 정책 소통이 그만큼 막힐 수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가

토론자로 나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모두 사회 공유부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본자산은 공공의 것(커먼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적 개인주의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우려를 드러냈다. 안 이사는 “기본소득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면서도 모두에게 적절한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상당한 누진적 조세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본자산 제도로 자산불



불평등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vs기본자산 온라인 토론회



평등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기본소득도 소액에서 시작할 수 있듯 기본자산도 반드시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기본자산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청년들이 겪는 취업, 주거, 결혼 등의 과제를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책임의 영역에 넣자는 것입니다.”

다시 두 발표자에게 마이크가 돌아갔고, 김만권 교수와 서정희 교수가 각각 말했다.

“우리가 소비사회에 사는 한 기본소득은 지속적 소비력을 준다는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처럼 큰 정치적 결정으로 이행하려면 단계가 있어야 하죠. 기본자산은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쉬워 점진적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자산에 대한 ‘탕진’의 우려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무엇이 탕진이고 탕진이 아닌지 기준은 없습니다. 문제는 소진하고 나서 삶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기본자산의 목표인 거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김병권 소장과 안효상 상임이사도 각각 마무리 발언을 했다.

“기본자산은 비용은 적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고, 기본소득은 효과는 크겠지만 재원이 많이 듭니다. 둘 다 처음에는 불완전한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면 두 정책을 조합하는 경로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해봅시다.”

“기본소득을 지지하지만 거시 자유라는 기본자산의 가치도 거부하기 힘들죠. 그런데 두 제도 모두 한국의 조세체계, 복지체계를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사회의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과제입니다.”

백승호 좌장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부의 세습, 세대 갈등 같은 문제를 어느 하나의 제도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제도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결합 모델이 무엇이나 하는 거다. 이 토론회로 정책 간의 소통을 시도한 건 의미가 크다. 다만 두 제도 가운데 ‘기본’이 무엇이나고 하면 나로서는 기본소득이라고 하겠다. 삶의 불안정성을 통제할 수 있어야 거시적 인생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버지니아 울프로 돌아가자. 울프가 500파운드의 큰돈이 여성에게(아마도 경제적 자립을 갈망하는 모두가 해당할 텐데) 매년 주어져야 한다고 할 때 그녀는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 같은 개념은 몰랐지만 사실 두 제도를 묶은 이상적인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셈이다. 그녀는 예산제약이나 조세저항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만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만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우리가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둘 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떠오르는 이유들을 찬찬히 살펴 고정관념의 부스러기를 하나씩 치워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